

# 청년세대 격차문제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필요성

이 원 재

## 1. 머리말

20대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동정’과 ‘희망’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 우선 ‘동정’은 세대 전체를 불쌍한 시대를 맞아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시선이다.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 세대’론은 이런 시선을 대표한다. 그리고 ‘희망’은 막연하게 ‘청년이 일어서야 나라가 일어난다’는 류의 시선이다.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노동력’으로 보며 이 노동력으로부터 새로운 생산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국경제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기도 하다. 과장된 청년창업 진흥정책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 두 시선 모두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들’로 사회를 나누고 ‘청년 아닌 사람들’의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대가 미래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대 자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회시스템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를 세대 간 갈등 또는 연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회의 지배적 다수가 될 세대’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한국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청년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며, 한국사회 특성과 청년세대가 잘 맞을지를 살펴보고, 맞지 않다면 현재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사회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를 설계하고 구현해 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Le Capital au XXIe siècle*)』에서 제시한

‘세습자본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특성과 청년세대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피케티 신드롬과 세습자본주의

『21세기 자본론』을 써서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세습자본주의’라는 화두로 전세계를 사로잡았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진행되다가는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세습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개인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믿음을 깨뜨린다. 조세제도 등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 없이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가 쓴 『21세기 자본론』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대중들의 폭발적 반응과 더불어 세계적 경제전문가들이 앞다퉀 이 책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판적 평론을 내놓으면서 관심과 열기를 더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연이어 이 책을 칭찬하면서 열풍이 일자, 그레고리 맨큐 등 보수적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케인즈가 당시 주류이던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친 것과 비슷하게, 과거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를 먼저 밝혀 정설로 알려진 사이먼 쿠즈네츠의 역U자형 곡선 이론을 반박하면서 논지를 펼친다. 쿠즈네츠는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지만 성장과 함께 다시 작아진다는 논리를 펼쳤다.

피케티에 따르면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과 급진적 분배 정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불평등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 불평등은 다시 커진다. 쿠즈네츠는 전쟁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사실 장기적으로 불평등은 끊임없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논지를 펼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방대한 부와 소득 분배 데이터를 주로 과세 자료를 통해 수집해 분석했다. 15년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했다. 피케티 저작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소득이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순히 분배 자체가 아니라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배력의 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일반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 소유의 장기 분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00~1910년 유럽 각국의 자본 소유는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반전이 일어나 1970년대까지는 불평등도가 완화된다. 전쟁과 공황 탓에 불가피하게 정부에 힘이 몰리고 이를 토대로 높은 세율과 누진세제가 도입되면서 양상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이던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 또는 미국의 ‘도금시대’로의 귀환하기 시작했다. 벨 에포크 시대와 도금시대는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여러 수치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분석 대상 국가들이 그 시기의 불평등도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의 불평등 상태에 처해 있다.

노동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를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소유한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면서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 $r$ )과 경제성장률( $g$ ) 사이의 관계에 따라 불평등도가 달라지며,  $r > g$ 인 상태에서는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불평등이 심화하게 된다는 이론을 세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수익률은 4~5% 수준에서 유지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이를 현저히 밑돌고 있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며 불평등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소득의 비중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개막되리라는 게 피케티의 생각이다.

자본소득이 커지면 자본소유자들이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며 이를 다시 저축하며 더 키우게 된다. 이런 자본이 상속되면서 후세대는 자본을 물려받아야만 경쟁할 수 있는 세습자본주의 시대에 살게 된다. 결국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시장의 승자를 가린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은 형편없이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자본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본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불평등이 완화된다. 따라서 피케티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 자본과세를 도입하면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의 통계와 이론에 대해서는 반박도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3. 한국사회와 세습자본주의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책은 2014년 9월 출판되자마자 시중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인기는 한국사회 역시 ‘세습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자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평등하던 사회에서 급격하게 불평등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자산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해졌었다. 다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경쟁하며 고도성장기를 맞았다.

그러던 한국사회에 최근 본격적으로 ‘상속을 통한 자산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2세를 거쳐 3세, 4세로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다. 그것도 경영성과를 통한 정당한 경영권 습득이 아니라, 장외주식을 값싸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고 주식 가치를 높여 상장시키면서 부를 물려주는 방식의 편법 상속이 한국 대표기업들에서 진행됐다.

재벌 일가에서만 상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중반에 태어나 1980~1990년대 호황을 거치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불렀던 베이비붐 세대 중 고소득자들도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상속하기 시작하고 있다. 1955~1963년 출생자들을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제 막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자식들은 이제 사회 초년병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로 지어지기 시작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세대다. 이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을 수 있던 이들이 그 아파트를 사고 자산을 불렀다.

이들이 그렇게 형성한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세습은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거액 자산가, 거대자본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형성한 부를 세습하는 재벌의 3, 4세 세습과 다른 의미를 띤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뉜다. 출발선이 달라진다.

한국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시대를 맞는 것은 처음이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사회에 살게 되는 셈이다. ‘세습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받을 기업이나 자산이 없는 계층의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상속 없이는 계층 상승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청년세대 사이에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서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다. 사교육비가 커져 재산이 없는 계층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주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피케티 열풍’은 이유있는 열풍이다. ‘세습자본주의’는 ‘자본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피케티가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를 우려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흐름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능력있는 개인이 기회를 얻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이 깨어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다. 어찌 보면 피케티가 해결하려는 문제도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며, ‘세습자본주의’를 구축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막을 정도로 심각해진 불평등’이다. 한국사회에서 피케티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맥락도 비슷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의 복원’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패러다임을 고민할 때가 됐다.

#### 4. 오너십 사회

한국에서 세습자본주의의 출발은 ‘내집마련’이라는 구호로부터 시작했다. 한국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됐다. 사람은 집 한 채 마련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나뉘어진다. 정부도 은행도 집 가지려고 돈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 건설회사는 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집을 짓고,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그 집을 사들이고 평생 갚아대면서 어른 노릇을 한다. 그게 한국사회였다.

‘내집마련’이라는 구호는 미국 정치에서의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구호와 통한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국내정책의 키워드로 ‘오너십 사회’를 내세웠다. 오너십 사회는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진

것을 더 늘리는 사회’를 뜻한다. 한 마디로 미국 국민들이 각자 집과 주식을 소유하면 미국에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다.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사회는 결국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보유율 증가로 이어졌고,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생긴 금융위기로 미국인들의 주식자산의 가치도 떨어졌다. 오너십 사회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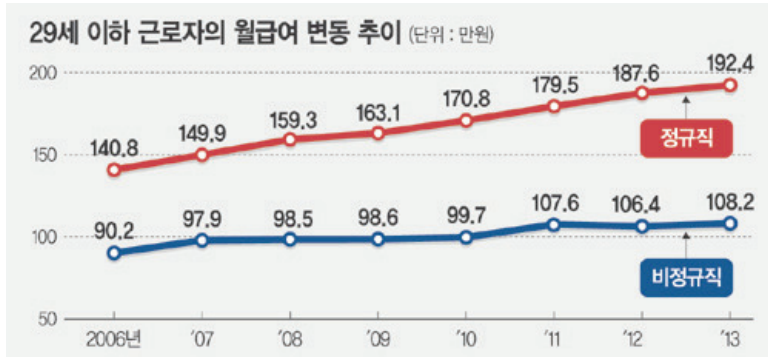
오너십 사회는 자산보유와 축적을 경제적 삶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데서 주요한 경제패러다임을 구성한다. 1980년대 초부터 영미권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기업에서의 주주가치 지상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괄된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한국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내집마련’과 ‘주주가치’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제의 기본 원리로 자리잡은 상태다.

실제로 1970~1990년대에 ‘내집마련’을 향해 달려가던 한국인들은, 2000년대 초반 ‘바이코리아’ 열풍과 함께 주식투자, 펀드투자를 향해 더 내달렸다. 모든 사람이 자산보유자가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자산 목록에 집뿐 아니라 주식까지 추가된 것이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윤리의 코드가 심겨지고 자라났다. 어디서든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며, 그 소유권이란 신성한 것이라는 코드였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제쳐두고 ‘주주’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믿음도 거기서 맥락이 닿는다. 자영업자가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팔아도 결국 돈을 버는 것은 땅주인이라는 상식도 이 윤리와 만난다. ‘오너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암묵적 사회 운영 원리가 생겨났다.

## 5. 불평등의 시대

자산의 세습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낳는다. 불평등을 그대로 세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세대에서 공평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습된 불평등이 더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세대에 능력을 발휘해 많은 소득을 얻은 이들이 자산을 새로 취득할 수 있다면 역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면, 불평등이 세습되고 심화하는 ‘세습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혹 당대에는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말이다.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는 그 두 가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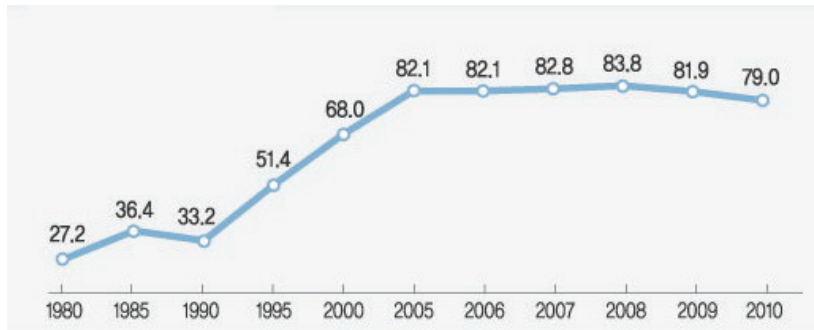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29세 이하 근로자의 월급여 변동 추이

대다. 2014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세대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2%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다. 2013년 29세 이하 정규직의 월급여액은 평균 192만 4천원이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108만 2천원이었다. 출발부터 격차가 심각하다. 여기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청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과거보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까지 하다. 2006년 정규직 월급은 140만원, 비정규직은 9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70대 99로, 2013년에는 192대 108로까지 벌어진 것이다. 7년 동안 정규직 월급은 37% 오른 반면, 비정규직 월급은 20% 올랐다.

새로운 자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낮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 청년세대가 소득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게다가 주택가격 상승 시기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 결정적으로 실질임금도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결국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불리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다. 1991년 분양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우성아파트를 보자. 32평형 아파트 한 채 분양가격이 당시 5,166만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2인 이상 가구 월 가처분소득은 97만원이었다. 즉 평균적 가정에서 4.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같은 아파트 가격은 5억 6800만원이다. 2인 이상 가구 월 가처분소득은 340만원이다. 아파트를 사려면 이제 13.9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 1990년대 초반보다 세 배가 더 걸린다. 아파트가 23년이나 지난 낡은 집이 된 점은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렇다. 이런 구조에서는 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2〉 대학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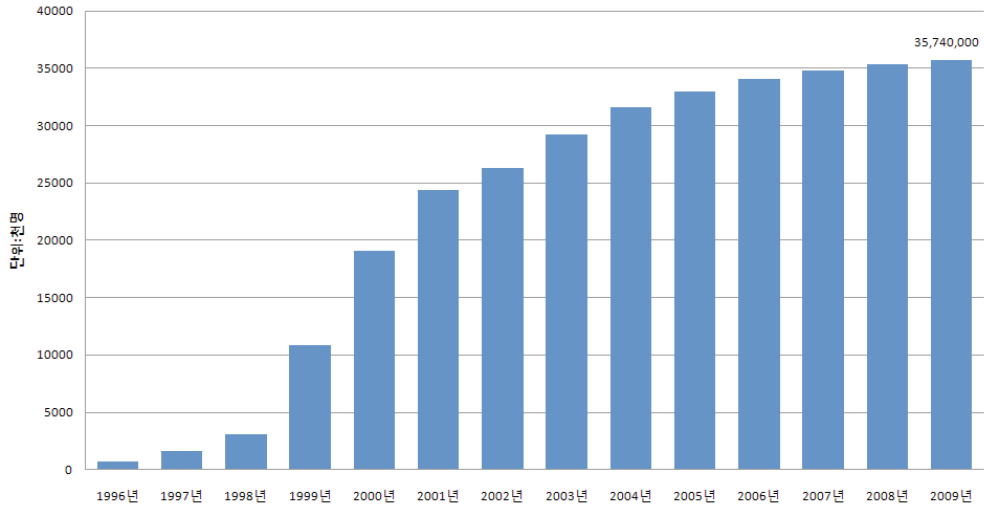
초 형성된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불평등은 단지 심화할 뿐이다. 세습자본주의의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

## 6. 청년세대의 동질성과 격차

격차는 커지고 계층상승 기회는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청년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동질적 특성을 띠고 있다. 청년세대의 세대 내 지식과 문화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적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격차와 기회의 차단이 과거 세대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첫째, 대학진학률이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한 사회의 대학은 지식과 문화가 집적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곳을 거쳐간 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문화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격차는 클 것이다. 1950년대 태어난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20% 안팎에 지나지 않던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림 2〉가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정도의 지식수준에 다다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대학진학률 20% 시대에는 대학을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믿었다. 대학에 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세대는 대학진학률 80% 시대에 살고 있다. 일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된다. 불평등과 기회의 차단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 욕구와 능력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데 보상이 현저하게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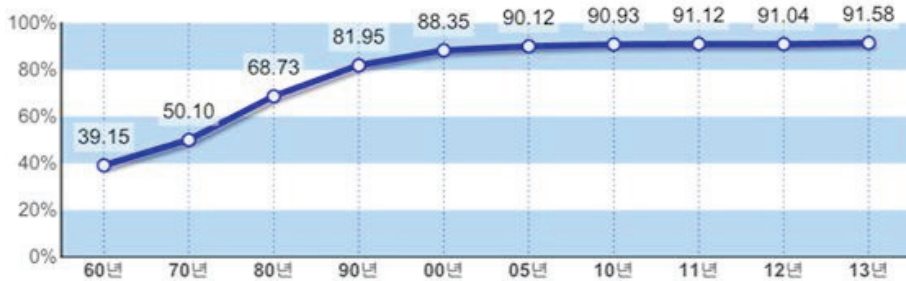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3〉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가 나기 때문이다.

둘째, 신기술에 대한 노출이 일반화됐다. 신기술 사용 능력, 특히 한국에서 2000년 이후 일반화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업무 능력이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슷하다면 대체로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기술에 대한 지식은 대학만큼이나 빠르게 평준화됐다.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야 컴퓨터를 만지게 된 사람이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실에서 지식을 다루며 일하는 화이트컬러는 그나마 컴퓨터에 접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1990년대 말 인터넷 붐 시기가 되어서야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하게 된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은 PC를 거의 접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넘어온 경우도 많다. 당연히 세대 내 격차가 크다. 1970년대 출생자들은 대학에 가서야 컴퓨터를 접한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못한 이들은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인터넷은 더 늦었다. 대학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 내 격차가 역시 컸다. 그러나 1990년대생을 떠올려 보자.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이고, 특히 초고속인터넷이 다 보급된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000년께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



〈그림 4〉 한국의 도시화율 추이

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은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상륙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 세대는 처음으로 인터넷 네이티브 세대이면서, 세대 내 기술격차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이 세대는 사실상 누구든지 화이트칼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됐다.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른 특징이다.

셋째, 도시화율이 높아졌다. 도시는 처음에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형성된다. 낮은 밀도의 주거가 중심이 될 수 있던 농어촌과 달리, 대공장 중심의 산업 재편은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고밀도 도시화로 이어진다. 농어촌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시 거주자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정한 방식을 채택하며 도시 문화가 형성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생활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생겨난다.

〈그림 4〉를 보면, 한국의 도시거주자 비율<sup>(1)</sup>은 1960년대 39%에서 1980년대 68%, 1990년대 81%로 올랐고, 2005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며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 출생자는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00년대 출생자는 열 명 중 아홉 명이 도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태생적으로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던 반면, 새로운 세대는 모두가 ‘도시 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됐다.

대학, 신기술, 도시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세대 내 지식격차는 수십년 사이에 극적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와 건주면 현재 청년 세대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동질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세습자본주의 고착화 경향으로 계층상승의 기회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었고, 보상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긴다. 능력과 문화는 동질적이 되었는데 보상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1) 전체 인구 가운데 읍면동 거주자 비율.

심해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배제와 차별도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미 이런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론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등 불공정 담론이 확산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배제와 차별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한 대학 내에서 단과대학이나 캠퍼스 위치를 놓고 ‘성골, 진골, 6두품’을 나누어 논란이 됐던 현상도 그 중 하나다.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출되는 혐오발언도 따지고 보면 ‘균등한 능력과 불평등한 결과’라는 상충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배제와 차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미래는 아주 작은 부를 더 얻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정성에 예민해지고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이가 적은 사람들끼리 차이를 보이기 위해 학벌의 미시적 구분이나 지역적 차이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장치를 통해 증오발언, 혐오발언을 내뱉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로를 통해 증오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게, 청년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7. 멤버십 사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성과 계층상승 기회를 높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거의 같았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이미 세대 내 자산 소유의 격차는 벌어진 상태다. 구조적으로 능력이 크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자산을 상속받지 못해 계층 상승이 가로막히는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대통령선거 때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는 정책이 그 핵심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를 줄이고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정책도 여기 포함된다.

둘째, 격차를 줄이는 평등지향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막다른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등이 한 축이다.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줄이고, 임금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용계약 바깥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패러다임을 짚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과 공유의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제조직은 그 자체로 협력과 공유를 조직 운영 원리로 도입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높으나 기회는 줄어들 청년세대가 지나친 경쟁과 증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내재화한 조직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청년 세대의 사회 운영 원리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며, 경쟁보다 협동을,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을 강조하는 운영 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세대는 동질성이 높지만 자산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눌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소유권’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은 격차를 심화하고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 중심의 ‘오너십 사회’는 이제 참여와 기여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는 ‘멤버십 사회’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 보유 격차에 따른 세습자본주의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운영 원리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는 경제적 조건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높이고,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동질화한 청년세대의 잠재력이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6 102동 306호

전화: 010-4817-9052

E-mail: timelast@gmail.com